

첨단과학인재 광주산류 급증

일자리 만들어주니 역외이탈 스톱

광주과기원 졸업자 박사과정 진학률 올들어 경중 대기업 연구소 유치·광산업 집중육성 고용 창출

광주과학기술원(광주과기원) 출신 첨단과학 인재들의 역외이탈이 최근 크게 줄고 있는 것은 광주과기원의 졸업생 수용 능력이 커진 데다 취업 가능한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광주에 잇따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사 과정이 없는 광주과기원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 및 수도권 40~50%, 경상도 30% 등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95년 개원 이래 4년 동안은 굳이 연구가 없는 광주에 남기보다는 고향이나 서울 등지로 가려는 학생들이 많았고, 특히 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 1995년 광주과기원 개원 이래 1997~2000년 석사학위 취득자의 박사과정 진학을 분석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1997년 졸업자 중 박사과정 진학자의 광주과기원 진학률은 82%이었으나, 1998년 74%, 1999년 72.7%, 2000년 69.6%로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광주과기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과 교수 및 연구팀의 연구수주액 증가 등으로 연구 및 취업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완화되기 시작, 2001년 76.2%, 2002년 77.1%, 2003년 83.6%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전기 85.5%, 후기 92.3%로 크게 올랐다.

광주과기원의 2006년 정부지원 예산은 470억 원, 교수나 연구팀이 각종 연구 프로젝트로 유치한 기금은 347억 원에 달한다.

석사학위 취득 후 취업에 나선 사람들의 지역 취업률 역시 2002년 3.2%에서 2005년 5.5%로 소폭 높아 지다가 이어 올 전기에는 36.8%로 급상승했다. 취업 기관 및 업체는 우리로광통신 1명, 한국광기술원 2

명, 삼성광전자 1명, (주)에이엔 1명, 금호석유화학 2명, LG화학 3명, 조선대 1명, 광주과기원 12명 등이다.

박사학위 취업자의 지역 취업률은 석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002년 34명의 졸업자 중 14.7%인 5명이 LG이노텍·순천대·조선대·광주과기원 등에 취업한 데 그쳤지만, 2003년 16.9%, 2005년 32.8%, 올 전기 41.4%가 지역 기업 및 기관에 취업했다. 특히 2005년 취업자의 경우 삼성광전자 1명, 전남대 1명, 조선대 1명, 고등광기술연구소 3명, 과학기술을 응용연구소 5명, 생명현상기능연구소 7명, 환경모니터링기술연구소 1명, 차세대광무선가입자망연구소 1명 등 취업업체 및 기관도 훨씬 다양해졌다.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1990년대 이후 첨단산업을 육성해 온 광주시가 광산업을 전락산업으로 중점 추진한 것도 지역 취업률 향상의 요인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첨단지구에 광통신·의료산업을 위주로 한 각종 연구기관이 들어서면서 고급 과학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광주지역 각종 첨단 과학 연구기관의 경우 이미 자리를 잡고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고용창출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왕기 광주시 경제통상과장은 "광산업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석·박사학위자만 현재 500여명으로 추정되며 중요 포지션은 광주과기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앞으로 첨단지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급 일자리' 창출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광주과기원 출신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과기원 석·박사 취업자 중 지역 취업자 수 및 비율

년도	석사 (지역취업)	취업률(%)	박사 (지역취업)	취업률(%)	합계 (지역취업)	취업률(%)
2002	94(3)	3.2	34(5)	14.7	128(8)	6.3
2003	78(3)	3.8	65(11)	16.9	143(14)	9.8
2004	96(4)	4.2	52(9)	17.3	148(13)	8.8
2005	73(4)	5.5	61(20)	32.8	134(24)	17.9
2006전기	43(2)	4.7	41(17)	41.4	84(19)	22.6
2006후기	19(7)	36.8	18(5)	27.8	37(12)	32.4



광주과학기술원 석박사들의 광주지역 취업이 크게 늘고 있다. 2002년 6.3%였던 지역 취업률이 2006년 후기에는 32.4%로 급증했다. 지난 16일 열린 2006년도 후기 과기원 석박사 학위 수여식. /원태준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황진하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7일 오전 영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통권 이양 늦추려면 방위비 분담 더 늘려라

■럼즈펠드 미국방 서신 파장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와 방위비분담 비율을 적시해 향후 과정이 예상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전시작통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방위비를 '50대50'으로 동등하게 분담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국방·외교부 등 관련부처는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 내용을 공유하면서 관련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정부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SCM)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작통권 이양시기에 대한 한미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환수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논란 불편한 심기 드러내

럼즈펠드 장관이 방위비를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군사구조가 연합방위체에서 '공동방위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미국내 달라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럼즈펠드 장관이 전시작통권 이양시기를 2009년으로 못박으면서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제시한 것은 두 사안을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작통권 환수를 요구한 쪽은 한국이지만, 이양시기와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미국인 만큼 이양시기를 늦추려면 방위비를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복선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한·미 군사협업 입장차

한국	미국
2009년(전시작통권) 및 2012년(전시작통권) 이후에 전시작통권 환수	2009년(전시작통권) 및 2012년(전시작통권) 이후에 전시작통권 환수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는 2009년(전시작통권) 및 2012년(전시작통권) 이후에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는 2009년(전시작통권) 및 2012년(전시작통권) 이후에
방위비 분담률 50:50	방위비 분담률 50:50
방위비 분담률 50:50	방위비 분담률 50:50
방위비 분담률 50:50	방위비 분담률 50:50
방위비 분담률 50:50	방위비 분담률 50:50

한반도 방위 공동책임 강조

더구나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시점과 관련해 한측은 2012년을, 미측은 2009년을 각각 염두에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목표연도를 제시할 의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측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2009년에 전시작통권을 이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럼즈펠드 장관이 목표연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및 외교소식통들은 미측이 다음달 14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핵 6자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더불어 전시작통권 이양시기를 정하는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시작통권 이양시기에 대한 미측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또 전시작통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 내 논

여당, '바다' 관련 연일 청와대 맹공 정계개편 신호탄인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파문을 계기로 정계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이 명백한 정책 실패로 나타나고 검찰 수사 결과 여권의 개입 등이 밝혀질 경우 대통령의 사과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레임덕과 여권의 분열로 이어져 정계개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 보다 더 날카롭게 청와대를 몰아부쳤다.

우선 여수 출신인 주승용 의원은 "예전엔 가물이나 재앙이 발생하면 임금이 '내 탓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사과가

그렇게 힘든가"라고 사실상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용규 의원(인천 부평을)은 "(번지 조사한 뒤 사과 여부를 따지겠다는 청와대 방침은) 한가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의원은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건과 관련 "청와대 검증 기준과 국민의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부 차원의 대국민사과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이어서 당청간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당초 내년 초반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정계개편 움직임이 오는 추석을 전후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남지역 모 의원은 "성인오락게임 파문으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며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아마 추석이 지난 10월 중반부터 당내 수도권 의원들이 민주세력 통합 등을 내세우며 정계개편의 깃발을 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코스모스향이 뿜뿜 풍기는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으로 초대합니다!

곡성군 자연속의 가족마을은 맑은 공기, 푸른 자연,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 **자연속의 가족마을** / 곡성읍 곡성리 / 061-830-0000
- ▶ **자연속의 가족마을** / 곡성읍 곡성리 / 061-830-0000
- ▶ **자연속의 가족마을** / 곡성읍 곡성리 / 061-830-0000
- ▶ **자연속의 가족마을** / 곡성읍 곡성리 / 061-830-0000

곡성군 자연속의 가족마을은 맑은 공기, 푸른 자연,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